

심창욱 “포폴리즘 행정” vs 姜시장 “유감” 날선 공방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서 설전

심창욱 “회전문 인사 근절해야” 지적
姜시장 “터무니없는 주장 유감” 반박
김나운 “시장 본회의장 이석 부적절”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시정 현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무소속 심창욱 의원(북구5)이 광주시정을 “포폴리즘 행정의 전형”이라며 전방위 비판하자, 강기정 시장이 “유감”이라고 맞받아치는 등 대립 양상을 연출했기 때문이다.

심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공무원 조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승진 배제나 불이익을 우려해 (부당한 지시들) 회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직원들) 돌아봐야 한다”며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지시라면 거부할 권리가 있다. 언제든 제보하라”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포폴리즘 공약, 선심성 정책 때문에 의회가 감사를 하는 것”이라며 “도시가 난개발되고 예산은 낭비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심 의원은 “동광주 틀게이트에 설치된 ‘무등의 빛’ 폴리 작품의 경우 당시 21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했으나 현재 식물처럼 새까맣게 방치돼 있다”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유지 관리비만 18억2천800만원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지적한 광주시 대표 예산 낭비 사례는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 매입 후 활용 지연 ▲‘무등의 빛’ 폴리 작품 반복 고장·18억원 유지비 낭비 ▲상무소각장 폐쇄 후 SRF 갈등 및 신규 소각시설 위장전입 수사 ▲전방·일신방직 부지 시공사 포기 사태 등이다.

심 의원은 또 “광주시의 산하·출자기관 평가도 엉터리”라며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기관이 광주시 자체 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도덕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를 문화경제부시장으로 임명하고, 김광진 전 부시장이 고액 출연료 논란 후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그 나물에 그 밥, 회전문 인사”라고 맹비난했다.

AI 사업에 대해서도 심 의원은 “민선 8기 4년이다 다 돼 가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거의 없다”며 “광주보다 늦게 뛰어든 부산·대구·울산 등은 이미 AI 산업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데 광주는 2019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심 의원의 질의에는 유감스러운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다”며 “민선 8기에 부당한 지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Y벨트 역사iting 존에 부도덕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질의해 광주시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강 시장은 AI 사업 지적에 대해서도 “광주의 AI 사업이 2019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열도당 토양은 주장”이라며 “AI 사업에 대해 전혀 심사 준비가 안됐고 공부도 안돼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 강 시장은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누릴 수 있는 특권부터 내려놓았다”며 “민선 8기 들어 24개 공공기관을 20개로 줄였고 노사 협의를 거쳐 임금과 지급 통합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시장은 “광주 공동체가 잘되는 방향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좋지만 잘되고 있는 점에 대해 응원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며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와 관련해 긴박한 상황이 있어먼저 자리를 이석하겠다”고 말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광주 건축도시문화제 개막

시간과 공간·건축으로 연결하는 도시를 주제로 한 광주 건축도시문화제가 21일 오후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려 시민들이 다양한 전시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사전 통보 없이 시장이 본회의장을 떠난 것은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오후 이어진 시정질문에서는 강 시장이 국가AI컴퓨팅센터 관련 긴급 회의를 이유로 불

참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나운 의원(북구6)이 강하게 비판했다.

김나운 의원은 “2조2천억원 규모의 AI컴퓨팅센터 유치는 광주의 사활이 걸린 사업이기에 시

장이 자리를 비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의회에 공식 요청이나 논의 없이 이석할 상황인지 의문”이라며 “시장은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변은진 기자

전남 서부권 청년비전센터 첫삽

무안 오룡지구 200억 투입 2027년 준공
창업공간·공유오피스·동아리실 등 조성

전남도는 21일 “무안 오룡지구에서 청년 취·창업, 문화, 교류 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전남도 서부권 청년비전센터의 첫 삽을 떴다”고 밝혔다.

가공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도의원을 비롯한 주요 내빈, 청년단체,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응원했다.

서부권 청년비전센터는 4천2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설된다. 도비 200억원을 들여 2027년 3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시설은 창업 공간인 청년점포, 공유오피스, 예술창작실, 소통공간인 동아리실, 공연장, 체육관, 특화시설인 E스포츠센터 등이다.

전남도는 서부권 청년비전센터 건립이 지역 안에서 스스로 기회를 창출하고 협력하는 생태계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립 부지에는 2027년 준공 예정인 오룡복합 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등도 조성될 예정으로 다양한 청년 문화 프로그램 및 도서관, 체육관, 돌봄센터 등 공공시설 집적화에 따른 청년 활동 지원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 청년비전센터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청년층 수도권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위기 환경에 대응해 청년이 필요한 공간을 조성,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427억원을 들여 거점 지역에 2개소를 건립한다. 전남도는 2022년 말 공모를 통해 무안과 순천 2곳을 선정했다. 동부권 청년비전센터는 순천 풍덕동 어울림센터 옆에 조성되며 연내 착공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가공식에서 “서부권 청년비전센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청년의 꿈이 지역의 미래로 이어지는 희망캠프”라며 “청년비전센터를 튼튼하게 잘 만들어 청년이 머물면서 활력을 찾는 청년 중심 공간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광양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강력 요청

도, 실사단에 철강 구조적 위기 강조

전남도는 21일 광양시에서 열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현지 실사에서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속한 지정을 강력 요청했다.

현지 실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실사단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대성에스엔엘 등 광양국가산단의 주요 철강기업을 방문해 현장 점검하고 기업과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경영 애로와 지역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광양은 생산의 88.5%, 수출의 97.6%, 고용의 97%를 철강산업에 의존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단일 산업 편중 지역이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중국산 저가재 수입,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 제

품 수요가 급감하면서 지역 산업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중소 협력업체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하락하고 고용감소와 청년층 인구 유출로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다.

전남도와 광양시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및 중소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주된 산업에 대해 지정 기간 2년 동안 ▲자금·용자 등 금융·재정 지원 ▲연구개발·성과사업화 지원 ▲국내 판매, 수출 지원 및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재직근로자 교육훈련, 실직자·퇴직자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를 우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양시원 기자

